

• 시론 •

정보가 기업을 좌우한다

윤선희/한양대학교 교수

비밀이란 사람이나 장소 그리고 시간 등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일 수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 안 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술적 비밀이다.

기술적 비밀은 기업주와 직원에 따라 그 입장이 다르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까지 기업비밀로 보고 관리하려 할 것이고, 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기술만을 기업비밀로 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기업비밀의 유출은 대부분 기업 내의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 기업주는 자사의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술후진국일 때에는 기술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해외주재원, 상사원 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들

이 우리의 선진기술을 빼내려고 산업연수생, 상사원, 공무원 등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은 낡은 기술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고, 그 이전료(로알티)를 받아 새로운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알짜 기업비밀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Online에 의한 비밀유출도 심각하다.

국내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도록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사업 참여, 이직자 이력서, 경쟁업체 사업, 퇴직직원의 ID, E-mail 등을 관리 및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국가의 관련 기관도 국내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정보를 파악하고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기술은 그 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의 길을 터고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노력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주요뉴스 •

한국형 정보화 세계 속으로

정통부 이상철 장관이 11월 중순 30여명으로 구성된 'IT기술·정책자문단'을 이끌고 약 2주일간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다.

정통부는 그간 해외 각국의 정통부장관 방문 및 자문 요청이 쇄도한 가운데 'IT기술·정책 자문단'이 첫 해외파견에 나서게 된 데 대해 한껏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불과 3, 4년 만에 'IT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대내외 평가를 뒷받침하듯 정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규모 IT정책자문단이 동남아 파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IT정책자문단 파견을 해외시장 진출이나 수출확대로 연결시킨다는 전략 아래 정책자문 대상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중이다. 또 '한국형 정보화모델'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주요 협력분야별 IT기술·정책 표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하고 현지 기술시장 조사 및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해당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전략도 마련해 놓고 있다.

코스닥위,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코스닥시장에서 보호예수기간 중 예약매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감자와 병행하거나 감자 후 1년 내에 제3차배정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하면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한달을 연장해줬으나 앞으로는 이런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등 퇴출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 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지분 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5%이상 주주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소액주주들에게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주주들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대 주주가 변경됐거나 회사가 대주주와 자금거래를 하면 당일에 공시토록 했다.